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59
----------	-------

발의연월일 : 2021. 11. 05.

발 의 자 : 金炳旭 · 김승수 · 김형동  
백종헌 · 서일준 · 신원식  
유경준 · 이명수 · 이현승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장애인 중 일부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거주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한계 및 운영 특성상 사회적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에 있어 가족이 더이상 돌봄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자립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주거서비스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주거서비스지원”을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 제3호).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 마.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을 설치함(안 제15조).

바. 주거서비스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등 주거서비스지원 체계를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전문인력에 의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와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장애인주택의 설치·운영 근거, 인증, 운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폐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주택”이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주택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주거서비스지원”란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형태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형태를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가족의 협력의무)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전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서비스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이하 “통합주거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전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주거지원위원회에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통합주거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통합주거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체계

제15조(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 ① 국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이하 “중앙주거인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실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이하 “지역주거인증원”이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주거인증원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거인증원을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주거인증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주거인증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할 구역의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주거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장애인이 적합한 주거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의 임무) ① 중앙주거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의 전 과정 업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2.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및 인증 기준 수립
3. 지역주거인증원에 대한 지원
4.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5.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6.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주택 전환 컨설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주거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제27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인증
2. 관할 지역 내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에 대한 운영 자문
3.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4.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이용적격성 조사 및 대상자 선정
5.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6.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지역별 자원 확보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장애인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여건 및 주거서비스지원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거서비스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관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그에 알맞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주거인증원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주거서비스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의 신청은 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역주거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의 지원대상, 개인별 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주거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이용적격성을 심사하여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21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이용적격성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주거인증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지역주거인증원은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주거서비스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용적격성 조사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③ 지역주거인증원은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주거인증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장애인주택의 종류 및 설치·운영 등

제24조(장애인주택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이용을 통하여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인주택의 종류) 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인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요양주택: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2. 집중돌봄주택: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거주·요양·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3. 지원주택: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지·정신적 장애인에게 거주·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4. 자립주택: 기능제한으로 인하여 간헐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5. 단기지원주택: 단기간의 휴식 및 일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6. 생활주택: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에 의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와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이하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센터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을 통하여 제27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정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주택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인증) ①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역주거인증원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는 지역주거인증원이 수행한다.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운영의 개시 등) 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주택 이용자가 다른 장애인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장애인주택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4. 그 밖에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의 개시·중단·재개·폐지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애인주택 이용절차) ①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장애인주택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을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의 장애인주택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에 이용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장애인주택 이용 적격성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본인부담

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은 장애인주택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장애인주택 이용자가 장애인주택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장애인주택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과 이용 적격성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의 의무) ①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

해진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거주서비스 지원, 요양 지원, 건강 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회계 부정이나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 등

제33조(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전환 과정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은 향후 2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인건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예산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사회주거서비스 전환 및 시설이용자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설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지역주거인증원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